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의 교육 담론: '악한 사교육' 담론의 균열과 재구성*

최선주(崔善珠)**

강대중(姜大仲)***

논문 요약

한국 사회에는 사교육 공급자들을 공교육을 침해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비교육적·반교육적 행위자로 보는 소위 악한 사교육 담론이 매우 강력하다. 그렇지만 학교 밖 사교육의 유력한 공급자인 교육산업은 그 규모가 작지 않으며 2000년대 중후반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될 정도로 성장한 교육기업도 등장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기업의 영향력 확대라는 맥락 속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분법적 담론이 균열 재구성되는 현상을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들의 관점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10명의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면담 자료 분석 결과,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들의 교육 담론은 학교 밖 교육 공급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사교육-공교육 간의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교육은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니라는 좋은 사교육 담론과 공교육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사교육은 사라질 수 없다는 사교육 불벌 담론이 정당화 논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 평생교육의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협력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사교육의 이분법적 구도가 교육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교육 공공성 논의 모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교육, 공교육, 교육기업, 교육 공공성, 교육 담론, 담론 분석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517)

** 제 1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plus 미래교육디자인 연구사업단 박사후연구원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I. 서론

정범모(2009)는 교육산업 종사자들을 한국의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생겨난 ‘오징어 장사’ 우화로 묘사한 바 있다. 교육산업이 경제력을 키우고 정치적 압력집단이 되고 있지만 본질은 교통체증이 발생한 큰 도로에 나타나는 오징어 장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우화는 사교육, 사교육 종사자, 교육기업을 대하는 부정적 시선, 즉 공교육에 기생하며 그 기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잘 보여준다. 천세영(2004: 298)의 지적대로 “사교육은 종종 공교육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논리가 확장되면 사교육은 非교육이거나 反교육”으로 재단되었다. 이런 부정적 시선은 사교육은 없어야 하는 악한 것이며 공교육과 대결 구도에 놓여있다는 담론으로 한국 사회에 유통되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는 일종의 “국민적 정답”(이종각, 2009: 2)이 되어 교육 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다. 1980년 사교육 전면 금지 조치 등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들에서 사교육은 금지와 억압의 대상이었다.

사교육을 악으로 보며 공교육과 대결하는 것으로 보는 주류 담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산업의 규모는 계속 팽창해왔다. 200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는 학원 강사 23만 8000명, 학습지 방문교사 7만명, 개인과의 교습자 21만 명 등 모두 51만 8000명이 사교육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유한구 외, 2009). 또한 통계청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약 14만 개의 교육기업에 52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3). 교육기업과 그 종사자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데, 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교육의 폐해 및 병리적 현상, 사교육의 효과, 사회경제적 계층과의 관계 분석 등에 집중되었을 뿐(서춘래, 2003; 이광현·권용재, 2011), 교육시장 공급자들의 교육 담론 및 그 성격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국가로 대변되는 공교육시스템 밖에서 상품으로서 교육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주체들의 교육 담론이 구성되는 거시적인 사회 맥락과 미시적 기업의 맥락, 그리고 그 담론이 교육기업 경영의 방향을 구성해내는 측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시장의 공급자에 대한 교육학적 관심의 부재는 학계의 지배담론과 연결되어 있다. 푸코는 담론이 세상과 사물에 대한 강력한 해석의 틀과 체계를 제공하고, 나아가 특정한 주체를 구현하거나 특정한 사회적 실천을 견인한다고 설파한 바 있다(Foucault, 1998). 교육학계의 연구는 교육 담론을 형성하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학계의 연구 경향 자체가 특정한 담론을 반영한 실천이기도 하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결적으로 바라보며 후자를 비(非)교육 혹은 반(反)교육으로 바라보는 담론이 한국 사회의 복잡한 교육 현상을 더 넓게 포착하는 관점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기업에 대한 연구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기업의 사업 영역은 오징어 장사 우화가 상징하는 입시위주 사교육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미 초중등학교 교실에서는 교육기업이 개발한 각종 온라인 교육 자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

다. 많은 취학전 아동들이 대교나 웅진씽크빅 등 교육기업의 방문교사와 학습지를 통해 한글을 배우고 있다. 교육기업은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를 패키지로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적으로 설립한 영어마을도 위탁 운영한다. 평생교육의 확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기업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특히 학점은행제와 같은 대안적 학력 인정제도나 고용보험환급 등 공공 재정 보조는 평생교육 영역에서 교육기업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대학과 같은 공적 교육 기관들도 영리 추구를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현실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천세영, 2004: 316)는 진단이 나오는 한 배경이 되고 있다. 강대중(2008)도 사회적 수요와 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시장의 글로벌화 등으로 인한 사교육의 팽창,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 와해와 공교육 위축, 교육의 산업화에 주목한 바 있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교육기업도 등장하였다. 주식시장 상장은 교육기업의 규모와 자본 동원능력을 크게 확장시켰다. 수능 동영상 강의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주)메가스터디는 2004년 상장 이후 해외에서도 투자설명회를 열며 주식시장에 이른바 ‘교육주’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대교, 웅진씽크빅, 크레듀, 정상JLS, 디지털대성, 청담러닝 등 16개 정도의 교육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상장교육기업들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며 중소 규모 학원이 대다수인 교육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김일영, 2009). 상당한 자본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교육콘텐츠를 갖춘 교육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대결적인 것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이종각, 2009: 3)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교육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정도로 성장하며 한국 교육의 무시할 수 없는 행위 주체로 분명한 위치를 갖게 된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연구자들은 교육기업의 영향력 확대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분법적 대결 담론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을 배태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 담론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사교육을 공급하는 당사자인 교육기업의 관점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기업의 영향력 확대라는 맥락 속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분법적 담론이 균열 재구성되는 현상을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들의 관점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사교육에 대한 부정적, 적대적 담론 속에서 어떻게 교육기업의 활동을 정당화하는가? 둘째,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연구는 기존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결 담론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들의 교육에 대한 담론에 주목해 한국 교육을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사교육에 적대적인 담론의 조건: 학교교육 중심의 사교육 이해

통계청의 사교육비 통계조사에서 사교육은 “초, 중,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통계청, 2013:6)으로 정의된다. 통계 조사를 위한 조작적 정의이지만 이 통계가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정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가 정책 수준의 사교육 이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12년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사교육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가의 공적 교육 체계가 존재하지만 영유아 단계나 대학 수준에서도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사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구분이 별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둘째, 사교육의 범위를 학교 밖으로 명시하여 사교육이 학교 내에서 공급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다. 거꾸로 보면 누가 무엇을 공급하던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사교육이 아닌 것이 된다. 셋째, 사교육을 보충교육으로 규정하여 수요자들이 사교육을 다른 관점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한다. 교육의 내용에 따라 사교육이 중심이 되고 학교는 보충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사교육에 대한 학술적인 정의로 널리 알려진 것은 이른바 ‘그림자교육(shadow education)’이다. 그림자교육은 사교육을 “주류 학교교육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는 교과에 대한 추가적인 가르침”(Bray, 2011: 19)으로 정의한다. 통계청의 사교육 정의와 대동소이한 이 정의는 사교육이 학교교육의 내용을 반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병렬적이면서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로 부각된다(이종재·김민조·고영준, 2010). 이 정의는 국제기구의 사교육 연구에 사용되고, 학술 논문에서도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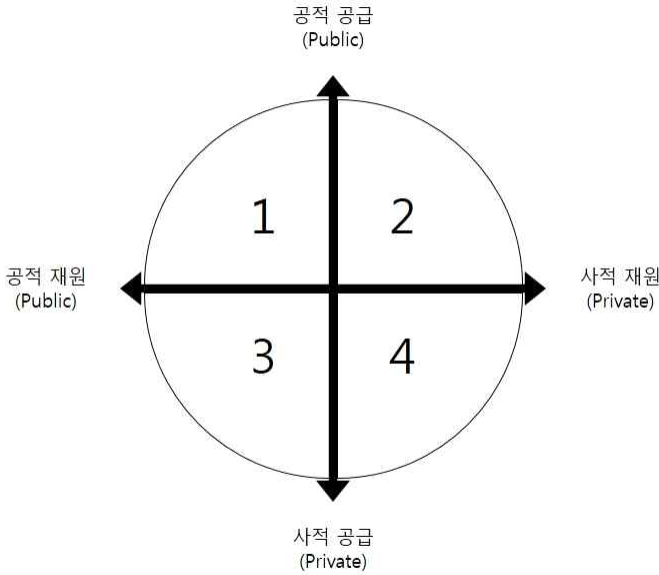
사교육에 대한 이러한 유력한 정의들은 학교 안에서 제공되는(사교육 종사자가 학교 안에서 공급한다면 더 이상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과 학교 밖에서 학부모가 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하는 사교육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가르는 기준은 비유하자면 학교의 담장인 것이다. 사교육 정책은 이렇게 분리한 사교육을 항상 억제하고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간주했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위협하고, 교육의 본질보다 이윤만을 앞세우고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종재·장효민(2010)은 사교육의 규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와 사교육의 원인요법으로 접근하는지 대증요법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역대 정부의 각종 사교육정책을 네 가지로 유형으로 나눈 바 있다. 첫째는 사교육이 규제가 가능하며, 사교육을 유발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학교평준화형 대책이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학시험을 폐지해 추첨 입학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 간 교육여건을 평준화해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학교 서열화 구조에서 소위 좋은 학교 입학에 대한 사교육 경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책이었다. 둘째, 사교육이 규제가능하다고 보며 대증요법을 취하는 사교육규제형 정책인 과외 금지, 학원의 심야교습 규제, 고액학원비 규제 등은 사교육 공급자들을 적대시한다.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사교육 공급자들은 곧바로 범법자가 된다. 알려진 대로 이 유형의 대책은 각종 비밀 사교육을 유행시키는 등 소위 ‘풍선효과’를 유발했고,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 등 법적 분쟁을 초래했다. 세 번째 유형은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자는 공교육내실화형이다. 사교육의 수요를 공교육으로 충족시키자는 것으로 사교육과 공교육을 적대적 경쟁관계로 보는 정책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전통적으로 사교육이라 간주되던 것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교육제공형이다. EBS 수능강의와 방과후학교가 대표적이다. 국가가 동일/유사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사교육 공급자들과 적대적 경쟁에 나선 것으로 한준상(2005)은 이를 “국가 과외”라 지칭한 바 있다.

요컨대, 한국 사회에는 사교육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이 만연해있다. 이것은 주로 학교 안의 공교육과 학교 밖의 사교육을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주로 정부 정책을 통해 후자를 악한 것, 금지되어야 할 것, 불필요한 것인데 유발되는 것으로 다루어온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사교육의 공급자인 교육기업들에게는 매우 적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조건은 학교 중심으로 사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게 된다면, 그 적대성이 완화 혹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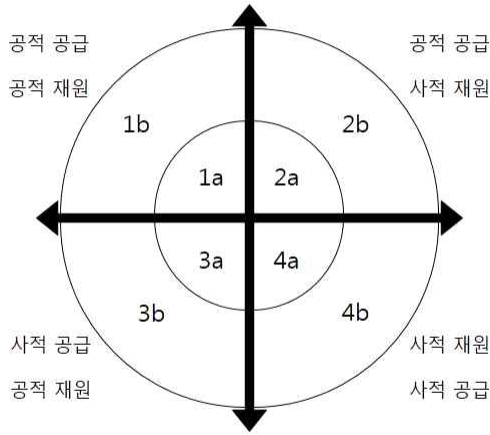
2.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 영역의 확대: 새로운 담론의 배태 조건

정부의 사교육 정책이 “국가과외”(한준상, 2005) 단계에까지 이른 현실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고 있다. 강태중(2008: 62-64)은 사교육의 팽창이 전통적인 의미의 사교육과 공교육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고 본다([그림 1] 참조). Klein(1984)의 서비스 산업 유형 구분을 기초로 그는 사적인 재원으로 공급되고 소비되는 영역과 공적인 재원으로 공급되고 소비되는 영역을 각각 전통적인 사교육의 영역(4번)과 공교육의 영역(1번)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에는 공적으로 공급되지만 사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2번) 반대로 사적으로 공급되지만 비용은 공적인 재원이 부담하는(3번) 혼재된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림 1] Klein (1984) 교육서비스 분류를 위한 개념 모형. 강태중(2008: 62)에서 재구성

Burchardt, Hills, & Propper(1999)는 교육을 포함한 국가의 다양한 복지 공급 체제가 Klein(1984)의 모형 보다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복지 공급의 수레바퀴’ 모형을 제안한다(Whitty & Power, 2000: 96에서 재인용). 이 모형은 서비스 생산과 비용 부담이라는 두 가지 축에 공공 의사결정이라는 안쪽 수레바퀴와 사적 의사결정이라는 바깥쪽 수레바퀴를 덧붙인 것이다([그림 2] 참조). 안쪽 수레바퀴의 공공 의사결정 영역에는 순수한 공적 서비스(1a),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2a), 정부가 민간의 서비스를 계약 구매해서 무료로 공급하는 서비스(3a),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정부가 민간의 서비스를 계약 공급하는 서비스(4a)로 나뉜다. 바깥쪽 수레바퀴의 민간 의사결정 영역에는 바우처를 통해 공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1b), 개인이 공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선택 구매하는 경우(2b), 민간에서 공급하는 서비스를 바우처, 세금 감면 혜택 혹은 재정 지원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3b), 완전히 시장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4b)로 세분화할 수 있다.



[그림 2] Burchardt, Hills, & Propper(1999)의 복지 공급의 수레바퀴 모형. Whitty & Power (2000: 96)에서 재인용

Burchardt, Hills, & Propper의 모형으로 교육 서비스 수요 공급 양상을 검토할 경우, 공교육 혹은 사교육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더 복잡해진다. 순수한 사교육의 영역은 4b로 국한되지만 이 연구의 대상인 상장교육기업들의 사업 영역은 4b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장교육기업들은 공공 의사결정 영역이나 공적 재원을 활용하는 영역에서도 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상장교육기업을 공교육의 담당자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는 논쟁을 야기하는데, 이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흐려지고, 그 둘의 성격이 혼재된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이 영역의 확대 현상에서 사교육-공교육의 대결적 담론의 한계와 재구성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방법

교육기업의 영향력 확대라는 맥락 속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분법적 담론이 균열 재구성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상장교육기업의 전·현직 최고경영자 10명을 면담 연구하였다. 교육 담론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크게 신문기사나 교과서, 정책보고서 등 출판된 텍스트 분석과 특정 주제에 대한 면담 자료 분석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전자의 출판 텍스트를 활용한 교육 담론 분석은 사회의 주류 담론의 구성과 유포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서덕희, 2003; 손준중, 2010). 전홍주(2011)가 우리사회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유포되는가를 신문기사의 담론 구성의 주체, 주요 주제, 언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 한 사례이다. 면담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은 주로 공적인 담론으로 표상되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집단이 가지는 내부의 담론 내용과 성격을 드러내는데 유용하다. 대학생들의 교육경험에 대한 담론 분석(이민경, 2008), 중산층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담론 분석(이민경, 2007), 부모의 참여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담론 분석(조미영·배지희, 2009)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다루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분법적 대결 담론은 언론보도, 정부 정책 문건, 학술 논문 등에서 이미 왕성하게 등장한 것이다. 이 연구의 초점은 이 담론의 형성 및 유포 과정, 구성 주체와 주제 등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이 담론이 지배적인 맥락 속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상장교육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담론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와의 비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비구조화 면담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면담자의 이끄는 질문 이후 연구 참여자와 역동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는 기법으로 가능한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말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Merriam, 1998). 수집된 면담 자료는 주제 분석 방법(Merriam, 199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들의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가에 주목하여 주요 주제를 범주화, 재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면담 자료는 장기간에 걸쳐 수집되었다. 따라서 초기 면담 자료에서 나타난 주요 주제들이 이후 면담 과정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며 분석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공동연구진이 각자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통하여 주제를 재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를 구성하여 면담 자료에 대한 공통의 이해에 도달하였다. 또한, 면담 자료의 분석에 집중한 이 연구와 동시에 진행된 상장교육기업의 성장 과정 연구 결과(강대중·최선주, 2014)를 참조하여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50만 명이 넘는 사교육 종사자 혹은 교육서비스의 사적인 공급자는 개인과의 종사자, 중소기업 학원 강사, 교육기업에 고용된 종사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들이 공급하는 교육 서비스의 대상과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모두를 포괄하기 보다는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로 연구 참여자를 한정하였다.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의 경우 매출액 100억 원과 시가총액 300억, 코스피(유가증권)의 경우 최근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및 3년 평균 700억 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장교육기업들은 학원을 직접 혹은 프랜차이즈 가맹

점 형태로 운영하거나 일대일 방문학습지 교사를 고용하여 유아부터 성인까지 폭 넓은 연령대를 상대로 교육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개인과외나 학원에서 독자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급하기도 한다. 상장교육기업들이 여러 형태의 사교육 공급자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까다로운 상장 조건을 갖춘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인식은 해당 기업에 고용된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교육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 면담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상장교육기업을 선별하였다. 이를 위해 거래소, 팍스넷, 와우넷, 네이버 4곳의 상장기업 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 기업이 교육서비스를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6개 상장교육기업을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회사의 홍보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면담을 요청하여 성사된 소수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다른 기업 최고경영자를 소개받는 ‘눈 굴리기 방법’(Miles & Huberman, 2009)으로 연구 참여자를 추가 확보하였다. 또한 지인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기도 하고, 연구자가 다른 모임에서 우연히 연구 참여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최종 연구 참여자는 10명으로, 이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표1>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번호	이름(가명)	성별	기업	해당 교육기업 주요 서비스 분야
1	강기웅	남	A사	교육산업 전반
2	김종훈	남	B사	학원프랜차이즈, 영어교재
3	이상훈	남	C사	온라인
4	신동주	남	D사	온라인
5	정경배	남	E사	출판, 학습지, 교육콘텐츠
6	이태일	남	F사	성인직무교육, 교육콘텐츠
7	오대석	남	G사	영어자격시험, 성인직무교육
8	전병호	남	H사	출판, 영어교재
9	홍승규	남	I사	온라인, 학원프랜차이즈
10	양준혁	남	J사	출판, 학습지, 영어교재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연구자들이 속한 대학의 IRB가 심의한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을 사용하고 그들의 경력이나 연령대, 회사의 성격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제시하지 않았다.

IV. 연구 결과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들의 교육 담론은 크게 학교 밖 교육 공급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사교육-공교육 간의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교육 정당화는 모든 사교육이 악한 것은 아니라는 좋은 사교육 담론과 공교육의 구조적 한계와 맞물려 사교육이 사라질 수 없다는 사교육 불멸 담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독자적인 콘텐츠를 갖춘 교육기업들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 영역에서 자기 입지를 확보하고 학교교육과 역할 분담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악한 사교육 담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사적인 콘텐츠 공급과 공적 자원 지원이 결합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다.

1. 교육기업의 자기 정당화: 악한 사교육 담론의 균열

1) 좋은 사교육 담론

일반적으로 사교육은 우리사회에서 필요악으로 간주된다. 연구 참여자들도 악한 사교육 담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사교육에도 좋은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필요악인 사교육에서 악한 측면이 제거된 것을 좋은 사교육이라고 규정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사교육의 악한 측면은 필요하지 않은 교육서비스를 학습자들이 구매하도록 가수요(假需要)를 창출하여 돈벌이에 골몰하는 것이다.

사교육 안에서 좋은 사교육을 만들어야 하는 건 ... (대부분 사교육업자들이) 애들한테 필요하지는 않은데 이걸 가르치면 애들이 점점 많이 모이게 되고, 애들 실제 인생이나 대학입시에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애들이 많이 모이더라 (하는 거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홍승규)

기업이 먹고 살라니까 당장 요만큼해도 되는 걸 이만큼 하는 거면 그게 공급이 수요를 확장하는 거죠. 사기를 쳐서. 사교육이 욕먹는 게 그런 거죠. 외고 갈 능력도 없는 애들 데려다가 외고 갈 애들 수강비 낮추는 거잖아요. 들러리 세우고. (전병호)

연구 참여자들은 사교육 공급자들이 늘어나면서 마케팅에 의존하여 수요를 의도적으로 확장하여 학습자를 “들러리”로 세우는 것을 사교육의 전형적인 악한 측면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사교육이 모두 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홍승규의 표현대로 “사교육 안에서 좋은 사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교육기업의 역할을 정당화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교육은 저렴한 비용으로 뛰어난 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상품은 품질이 어떠한지를 미리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가격이 품질에 견주어볼 때 적당한 것인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사교육 공급자 중에서는 이러한 교육상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훈은 이렇게 내용이 부실하면서 비싼 비용을 받는 사교육을 나쁜 사교육으로 규정하며 최고의 고품질 강의를 값싸게 공급하는 점에서 자신은 좋은 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저는 제공하는 가치에 비해서 비싼 사교육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면서, 아주 저렴한 사교육으로 간다고 하면, 괜히 비싸기만 하고 질 떨어지는 사교육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절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한 3분의 1 정도로 (가격을) 책정했고. 일단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사교육으로 방침을 잡았어요. (이상훈)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좋은 사교육으로 보고 있었다. 사교육을 절감하는 사교육은 그 자체로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 강사의 강의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소수에게만 주어져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그 강사의 강의를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고 가계의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정당화 방식은 입시 교육기업의 최고경영자였던 이상훈과 신동주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들에게 인터넷 강의라는 상품은 사교육 영역에서 사회적 윤리를 구현하는, 즉 좋은 사교육을 공급하는 길이었다.

그때까지 부잣집 애들만 가르쳤었어요, 수업료가 상당히 비쌌어요, 월 200만원씩 받고 그랬으니까... 학생하고 나하고의 개인 윤리로는 이게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사회 윤리적으로 심각한 악이다... 결국 강남의 좀 부잣집 애들 소수를 성적을 올려주면, 틀림없이 누군가 애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교육 자체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설 때에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으니까... 사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한다 그것이 우리의 명분이었고, 그래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교육, 그렇게 해서 D라는 온라인 기업을 만들게 되었죠. (신동주)

반면, 성인의 직무교육 상품을 공급하는 교육기업의 연구 참여자들은 입시 준비 상품을 다루는 교육기업들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들은 악한 사교육이라는 담론에 대응하는 대항 담론과 정당화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과의 평행 또는 병렬 구도 하에서 공교육과 부정적 관계를 맺는 그림자 교육 프레임 (이종재·김민조·고영준, 2009: 17)이 평생교육의 영역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교육체

계와의 경쟁구도에서 오는 “원죄의식”이 없이 성인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역량을 일반인이나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역량을 올리는 그런 교육도 중요한 요소다, 이걸 사교육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교육으로서 국가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사업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출발했어요. 이걸 잘하면 사교육, 학생 교육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훨씬 원죄의식이나 이런 거 없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분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

의무교육 단계 이후 성인과 노인을 위한 공교육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 교육기업을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뜻하는 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기는 어렵다.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사교육과 공교육이라는 이분법은 그 설명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사교육 불멸 담론

교육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사교육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담론은 사교육 불멸 담론이다. 정부가 사교육을 악으로 규정하고 금지 혹은 억제하려고 각종 정책을 구사해왔지만, 사교육은 정부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의 수요가 있는 이상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기업은 이러한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교육의 공급자로 정당화된다.

사교육을 잡는다는 게 어불성설인 게... 교육기업은요. 정부가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고객이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고객의 수요가 있는 이상은 그건 누군가 하는 겁니다. 교육기업이란 타이틀을 붙였든 안 붙였든 상관없이, 고객이 원하고, 고객이 원하는 걸 해주면 돈이 되는데 왜 안합니까? 그겁니다. 지금 있는 사교육 업체 죽인다? 죽일 수 있어요. 억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고객의, 커스터머(customer)의 니즈를 죽이는 것이 아니면 어디 어떤 식으로 다른 뭔가...(양준혁)

사교육이 불멸하는 중요한 이유는 공교육의 구조적인 한계와 맞물려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좀 더 개인화된 맞춤교육을 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공교육 체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능력과 관계없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획일화된 시스템이다. 부분적으로 수준별 수업이나 특성화학교 등을 통해 학습자의 요구에 대응하지만 학습자의 개별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전병호는 학교에서 학습 수준과 학습스타일에 따라 개인화된 교육이 가능하다면 사교육은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교육기업은 공교육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는 개인화된 학습 욕구에 특화된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교

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자기를 정당화를 하는 것이다.

사교육의 이런 개별화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개인의 역량을 발굴하고 특화시켜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낸 사례들과 연결되면서 공교육 한계론에서 비롯되는 사교육의 역할론은 더 힘을 얻는다. 사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훈은 바둑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계 일등 만들어 낸, 공교육이 만들어 낸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나요? 전 냉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또 세계 1등이 된 사람들을 좀 더 보면 우리 국가 공교육에서 메인으로 잡고 있는 과목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바둑 세계 최고 1등이죠. 학교에서 바둑 가르쳤나요? 물론 나중에 바둑 그저 특성화 고등학교 생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체는 그게 전부다 사회교육[학원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사회교육[학원교육]의 특징이고 장점이었다. 특화시킬 수 있고. (김종훈)

연구 참여자들은 사교육이 불멸하는 다른 이유로 입시의 빠른 변화에 대한 공교육의 대응 능력의 부재를 들고 있다. 정부는 한 번도 사교육을 키우겠다고 한 적이 없지만, 계속된 잦은 입시 제도의 변경에 공교육을 신속하게 반응 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입시에 빠르게 대응하여 교육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육기업의 팽창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국가가 계속 입시 제도를 바꾸니까... 수능제도 바뀌고 내신 들어오고 하는 것에 따라... 특목고가 생기고 이러면서 계속 새로운 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죠. 그런데 (학교) 내부에는 인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수요를 감당 못하는 거죠. 개정도 되고, 새 책도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사교육의 이런 변창은 국가가 다 만든 거예요. 누구나 얘기하듯이. 국가가 저렇게 하면 공교육은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전병호)

사교육이 불멸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학습자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교육 종사자들이 “칼날”이 서있기 때문이다. 실제 학습자들을 만나는 교사의 치열함에 있어서, 학교 교사와 사교육 교사는 마치 ‘아마추어 대 프로(Amateur vs. Professional)’와 같이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눈에 학교 교사는 자기 계발을 거의 하지 않고 안정된 교직에 안주하는 존재로 비추어졌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구도에서 공교육이 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예민함이 없어요. 공교육에 계신 분들이 그 예민함이 있었으면 공교육이 그렇게 될 리가 없구요... 한 시간 애들 줄지 않게 하려고 저는 여덟 시간씩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는 순간에 나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프로라고 생각하는 건 밥줄이 달려있으면 프

로고, 밥줄이 안 달려있으면 아마추어예요. 공교육 선생님들이 칼날이 서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것 가지고 평가 못 받으면 나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하는 각오만 서면 사실은 사교육은 별 경쟁력 없습니다.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학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교육보다 못합니다. (양준혁)

양준혁이 지적한대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교육수준과 역량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학창시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에 진학하고, 교원임용고사를 통과한 우수한 인력이 공교육 현장에 배치된다. 그러나 교직으로 진출한 이후 학교교사들의 자신이 가르치는 수업과 결과에 대한 예민함과 치열함의 부족은 반대로 프로의식을 갖춘 사교육 교사에 대한 학습자의 수요로 연결되면서, 사교육 불멸 담론의 한 근거가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교육이 이와 같이 자신의 본분은 다하지 않고 사교육을 적으로 오인하여 경쟁하려고 하는 것을 한국 교육의 진짜 문제라고 보았다. 흔히 인성교육은 공교육의 영역이고, 사교육은 인성교육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양준혁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사교육 영역에서 오히려 인성교육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사실 아이들 키워보면 알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지식 많은 애들만큼 위험한 게 어딴습니까? 그런 건 섬칫섬칫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눈물 흐리는 교육자는 없는 거고, 정부는 그런 부분을 방치를 하고... 그런 교육의 중요한 영역도 공교육이 담당을 못하면 그것도 (사교육에) 빼기는 거예요. 아마 저런 거 생길지도 모릅니다. 훈장님이 애들 버릇 가르치는 학원. (양준혁)

요컨대, 연구 참여자들은 사교육에 대한 적대적인 담론 속에서도 한국 교육에서 교육기업이 고유한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정당화 담론을 구축하고 있다. 이 역할은 공교육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각되기도 하지만 좋은 사교육 담론으로 표상되는 것처럼 수요자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도 나타났다.

2. 공교육과 사교육의 파트너십

1) 학교교육과의 공조와 역할 분담

연구 참여자들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반드시 대결적이지 않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악한 사교육 담론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뚜렷한 구분을 전제하지만 이미 우리 교육현실에서 공교육은 사교육의 도움 없이 존재하기 어려우며 둘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기업이 만든 다양한 교육 자료가 학교 수업시간에 보편적으로 쓰이

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오대석은 교육 자료 외에 교과서도 사교육을 공급하는 교육기업이 만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심지어는요 □□□ 서비스를 하는데 공교육 하는 현장에 사교육회사가 들어가서 수업시간에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슈를 제기하면은 엄청나게 큰 이슈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교과서도 전부 다 사교육업체가 만들지... 그렇다면 사교육 영역을 (공교육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구분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안티(anti)합니다. (오대석)

공교육과 사교육이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담론은 마치 학교교육이 사교육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교육의 공급자인 교육기업들의 서비스는 학교 교실 수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것을 부정한다. 오대석이 언급한 초등학교 수업 보조자료를 제공하는 □□□ 서비스는 14만 명의 초등 교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는 전국의 초등학교 학급 수 보다 많다.

교육기업들은 학교 교실에서 사용되는 교육 자료를 개발할 때 전·현직 학교 교사들과의 공조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자기 회사의 교사용 교육 콘텐츠 구축 과정을 이태일은 “교사들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전병호도 영어교재 개발을 기업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던 것을 바꾸어 현직 교사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영어 교재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변화를 학교 교사들이 현장에서 더 빨리 읽어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지냈던 오대석도 학교 현장의 감각을 반영하려고 콘텐츠 개발 인력으로 전직 교사 출신들을 많이 뽑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기업이 교육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담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학교와 파트너가 되어 역할 분담을 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오대석은 교사들의 의식이 변화된다면 “공교육에서는 사교육에서 잘 하는 것은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을 연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정경배는 교육기업과 사교육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너무 강한 한국에서는 학교와의 파트너십이나 역할 분담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그는 자기 기업이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의 교육부와 맺고 있는 파트너십을 소개하며 이런 것이 한국에서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저희들이 OO [나라이름] 교육부가 주최하는 수학경시대회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거 문제를 내고 있어요. 채점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것까지 다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으면 아마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정부가 돈을 먹었겠네, 왜 사교육기업이 공교육의 일을 하느냐는 등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OO의 교육평가원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만 명 문제지가 우

리나라로 와요. 그걸 우리가 다 (재점) 돌려서 진단서(까지) 해서 배 태워서 보내거든요. (정경배)

정경배는 교육기업의 지원을 받아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어려운 이유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분리하고, 사교육을 주범으로 생각해서 사교육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사교육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 공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것인가 이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이 거꾸로 사교육을 죽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교육만으로 이걸 지켜내겠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나? 정말 추세가 가능한냐는 거죠. (정경배)

학습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결국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를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정경배의 기업에서는 2,0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공부방과 1,000개에 이르는 소규모 학원에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공짜로 학교에 공급할 의사가 있지만 소개를 한 번 할 방법조차 없다며 교육기업의 프로그램을 교육청이 직접 구매해 학교 현장에 공급하는 외국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육기업의 서비스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사교육 담론과 맞닿아 있다. 자신들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사교육에 해당하며 그 구매자가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 밖 교육 공급자들을 교육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공교육의 파트너로 삼아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교육 공급자를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장사꾼이나 입시에 기생하는 시험 기술자로만 볼 때는 불가능한 접근일 것이다.

2) 독자적인 콘텐츠와 철학: 경계 영역에서의 입지 구축

학교교육과의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의 기저에는 전통적인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둘 사이의 경계 영역에서 확실한 입지를 구축했다는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이 자신감은 사교육이 더 이상 학교교육의 그림자로 존재하지 않는 현상과 관련된다. 상장교육기업들은 수백억을 투자해 개발한 독자적인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학교와 입시를 매개로 소모적인 영합 게임(zero sum game)식의 경쟁

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콘텐츠 공급자를 지향하는 것이다.

OOO는 콘텐츠를 판매하는 회사다... 언어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 어떤 툴 [도구], 어떤 사업 장소, 어떤 영역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가 외형적으로 보면 각기 다른 상품들로 표현될 수는 있는 거죠... 그걸 고민해서 만든 게 △△△이라는 프로그램인 거고. (김중훈)

김중훈의 기업은 독자적인 영어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여러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공급한 경험이 있는데 그 중 한 사립학교로부터 아예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진행 중이었다. 공교육 내부까지 진출한 김중훈은 “말겨만 준다면 열심히 해서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 영역에서 자기 입지를 확실하게 다졌다는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 방과후학교 수업을 1년 동안 하고 나더니... 작년 말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정식 영어프로그램을 맡아 달라. 아직은 사립학교고 교육당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소속만큼은 학교 선생님이로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 프로그램은 해 달라. 그래서 계약해가지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OO 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했으니 인근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서 관심 있게 보지 않겠어요? (김중훈)

평생교육 영역의 상장교육기업들은 독자적인 교육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도입한 고용보험환급제도는 성인 대상 직무교육 시장을 크게 확대시켰다.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인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수업료의 대부분을 돌려주는 제도로 공적 재정 지원과 사적 교육 콘텐츠 공급이 결합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한 것이다. 이런 교육서비스를 사교육 혹은 공교육으로 단정하기 쉽지 않다. 정부의 공적 교육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성인의 직무능력 및 재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수요와 빠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들의 교육 수요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공공영역은 제도를 만들고, 그 산업이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이랄지 이런 거 할게 많은 것 같아요. 고용보험환급과정, 이런 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잘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찾아야 하는 거죠. 정부가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직장인 교육과정도 정부가 하는 무료교육과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거기 교육이 시쳇말로 좀 허접하구요. 퀄리티(quality)도 낮고 그래서 인기도 없는 반면에 그런 무료교육이

많기 때문에 유료교육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이태일)

상장교육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해가며 기업 보다는 교육에 더 방점을 찍는 나름의 경영 철학도 가지고 있었다. 신동주는 “우리는 기업의 성격 보다 교육이 우리에게 일차적인 정체성”이며 “매출의 뒷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성적을 올려주고 단기적인 이익을 내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교육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비록 영리 추구를 기본으로 하지만 인간의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 추구에 집중해야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수 연구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였다.

OO의 기본적인 문화가 어떤 당장의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OO은 직원들이 인사를 할 때,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의 10년 후를 생각한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정경배)

교육기업의 CEO를 하면서 행복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비즈니스 모델은 나한테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가치를 상승시켜줘야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돈이 되는 거고. 교육의 상품은 그러한 철학이 들어가야겠다... 특히 교육의 상품에는 그런 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대석)

이게 사업으로 가버리고 교육이 빠지면... 그 구성원들이 일을 할 때 동력을 잃어버린다고 할까요? 학습지 교사들이 몇 천 명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그래도 나는 아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자부심을 못 심어주면... 일할 재미가 없거든요... 사람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에 대한 진실성을 가져야만 그 기업이 유지가 된다. 그게 없으면 일시적으로 활짝 하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유지시키지 못하니까요. (양준혁)

이런 철학은 교육을 공급하는 기업이 다른 소비재를 공급하는 회사와 차별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잠재능력의 개발과 장기적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을 공급한다는 것은 교육기업의 경영윤리이자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나름의 노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연구 참여자들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파트너십이 잘 형성된다면 사교육이 공교육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공교육이 채워내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또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이 넓어지고 성인들의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콘텐츠를 갖추며 교육의 한 주체로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V.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악한 사교육 담론이 지배적인 사회적 조건 속에서 상장교육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구성해내는 교육 담론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악한 사교육 담론에 독특한 방식으로 저항하며 자기 정당화 담론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은 입시 위주 교육에 활용되는 사교육은 일종의 필요악이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필요+악’인 사교육에서 악을 제거한 ‘좋은 사교육’과 필요를 악용해 가수요(假需要)를 만들어내 수요자에게 필요 없는 부담을 증가시켜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나쁜 사교육’을 구분한다. 이들이 보기에 좋은 사교육은 저비용 고품질의 상품으로 사회적 교육 격차의 완화에 기여한다. 좋은 사교육은 또 인간의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상급학교 입시 목적이든 성인들의 직업 역량 개발 목적이든 교육기업은 이윤추구 보다는 좋은 교육을 사적으로 공급하는 것에서 근본적인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좋은 사교육 담론은 사교육이 무조건 악하다는 담론에 균열을 내며 자기를 정당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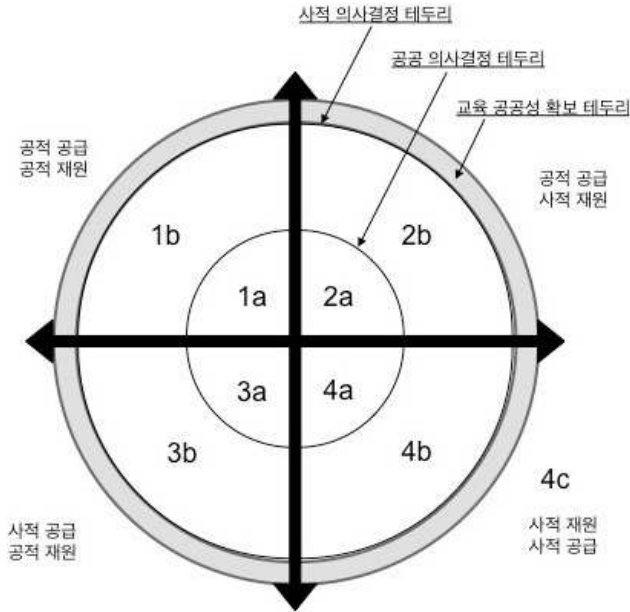
다른 한 편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사교육이 사회변화에 공교육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공교육이 절대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자기 정당화를 하기도 한다. 사교육 불멸 담론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담론은 소위 공교육이 담당할 수 없는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가 있는 한 사적인 교육 공급이 사라질 수 없다는 논리를 취한다. 또한 이들은 소위 선한 공교육 담론 즉, ‘학교교육=교육 본질 추구’라는 도식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악한 사교육 담론에 저항하기도 한다. 사교육 불멸 담론을 고려한다면 정부 정책이 사교육을 악하다고 비판하며 사멸시키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정부는 오히려 공교육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반드시 대결적인 것은 아니며 상장교육기업의 여러 사업 영역에서 파트너십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통적인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경계가 희미해진 영역은 공교육 혹은 사교육으로 단정적으로 부르기가 곤란하다. 연구 결과에서도 언급한 사립초등학교의 공식 교육과정인 영어 수업 시간에 교육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공공 재원으로 마련한 시설이고 공공기관이 관리감독을 하지만 교육 운영 일체는 교육기업이 맡고 이용료는 학습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이 경계가 희미해지는 영역 내에서 독자적인 콘텐츠를 갖추고 교육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장되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기업은 교육이라는 가치와 기업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지만 전자에 더 확실한 방점을 찍어야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상장교육기업들은 학교 교육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교육의 실제적 공급자로 자리 잡으려는 것이다. 이는 학교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공교육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 도전은 넓은 맥락에서 공공성에 대한 도전과 맞닿아 있다.

학교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이러한 도전은 보다 넓은 맥락에서 '공공성(the public)'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진다. '공공(公共)'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정부도 아니며 국가도 아니다. 정부의 관료나 국가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압제할 수는 더더욱 없게 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제3섹터와 NGO 그리고 공동체, 조직들이 새로운 공공의 주체들로 등장하고 있으며 시장은 새로운 의미의 공적 공간(public space)으로 대두되고 있다. (천세영, 2004: 299)

교육기업은 사업을 확장하며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수행 주체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로 불러올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의 상상력과 탐색의 공간을 확보해가는 것이다. 시장에서 교육을 공급하는 교육기업에 대한 의존을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으며 이들을 교육의 행위 주체로 인정한다면,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결 관계로 보고 후자를 악한 것이라고 보는 담론에 변화가 있어야 생산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즉, 악한 사교육 담론의 균열이 필요하다. 이 균열은 이 연구의 참여자들인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종각(2009)은 새로운 개념의 사교육 대책을 고려하는 맥락에서 다음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첫째, 악한 사교육 대 선한 공교육이라는 대결적 관점을 버리고 양쪽 모두 우리 사회의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니 둘 사이를 융합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교육을 없앨 수 없다면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 관점은 교육 거버넌스에서 공-사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강조하는 최근의 논의들(Horn, 2011; Robertson, Mundy, & Verger, 2012)과도 연관된다.



[그림 3] 교육기업 등 학교 밖 교육 공급자를 포괄하는 교육 공공성 논의 모형

[그림 3]은 Burchardt, Hills, & Propper(1999)의 복지 공급의 수레바퀴 모델에 교육 공공성의 확보를 부각시키는 굵은 테두리를 외부에 두른 개념 모형이다. 이 모형은 교육을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단순하게 나눌 것이 아니라 학교 등 공적 공급자와 교육기업 등 다양한 사적 공급자의 역할을 모두 포괄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는 개념 모형이다. 공적 공급, 공적 자원, 공공과 사적 의사결정 영역(1a와 1b영역에 위치)에 위치한 것이 순수한 의미의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적 재원에 의존하더라도 공공 의사결정과 공적 공급의 형태를 갖는 사립학교(2a와 2b 영역에 위치)도 공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적 공급 체제를 갖추는데 사적 재원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공적으로 공급되는 교육에는 이외에도 여러 형태가 가능하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 교사들이 진행하는 유료 방과후학교를 배우처를 이용해 무료로 선택 수강하는 경우(1b 영역), 학부모가 비용 전체를 부담하지만 학교의 교사가 진행하는 보충 수업이나 방과후학교(2b 영역)도 공적 공급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모형의 1과 2영역은 공적 공급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교육 공공성 확보 측은 2b 영역의 비용 부담과 관련된 논쟁과 관련될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교육이 공급될 경우 공적 공급의 공공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반값 대학 등록금 논쟁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공적 공급 체제가 학교 교육에 비해 발달하지 않은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모형 3과 4에 해당하는 사적 공급 영역을 공적 재원이나 공공 의사결정을 통해 공적으로 포섭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

보험환급 제도의 인증을 받은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이나 정부가 인정한 학점은행제의 교육프로그램은 공공 의사결정 테두리에 의해 평가를 받은 뒤에 제공된다. 이 평가는 주로 교육기업들이 시장에서 사적으로 공급되는 교육에 일종의 공공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육기업의 최고경영자들 중 평생교육을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는 이들은 이런 이유로 소위 악한 사교육 담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었다. 이는 공공 의사결정 테두리 효과로 사적 공급이 공적으로 포섭된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공적 포섭을 소위 공교육과 사교육의 협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상장교육기업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교육 콘텐츠를 학교에 공급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3a와 3b 영역에서의 협업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영리 재단이 공립학교를 위탁운영하거나, 낙오방지법에 따라 학생의 보충수업을 민간의 교육업체가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이 영역에 해당할 것이다. 3b 영역에는 사적 공급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습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거나 정부가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태도 포함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3a와 3b 영역이 더 확대되려면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사적으로 공급되는 교육의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특히 학교교육 단계에서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모형의 4a 영역의 사례로 학교 방과후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사적 재원과 사적 의사결정에 크게 의존하지만 학교에서 공급해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 사적 공급이라는 점에서 공공 의사결정 테두리도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형의 4b 영역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그림자 교육의 사교육 정의에 해당한다. 물론 교육 공공성 확보 테두리 밖의 4c 영역에 위치한 교육도 얼마든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 서비스가 4b 영역 또는 4c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즉, 사적 재원에 의존하는 사적 공급 교육 서비스에 교육 공공성이라는 잣대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교육은 “초, 중,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공공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좋은 사교육과 나쁜 사교육을 구분하며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좋은 사교육 담론은 그들 나름의 교육 공공성을 확보한 사교육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4b 영역 내에 좋은 사교육을 위치시키며 나쁜 사교육이라 불리는 것들을 4c 영역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물론 이 좋은 사교육 담론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 여부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좋은 사교육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그 조건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사교육이나 공교육이 담당할 수 없는 것을 사교육이 맡는 경우가 그 조건인지도 논의할 필요

가 있다. 한 사회에서 관찰되는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공공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한다면, 사적재원-사적공급-사적 의사결정 테두리가 관여된 교육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나타나는 지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 공공성 확보 논의는 교육기업 등 사적 공급자의 역할에 의존하는 평생교육에서도 중요하다. 물론 공적 재원과 공적 공급, 공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확대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영역의 위축을 전제로 평생교육에서의 교육 공공성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 논의에서 Edwards(1997)는 학습이 일상화된 사회인 학습사회를 교육된 사회, 학습망, 그리고 학습시장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Edwards는 학습사회를 국가, 시민사회, 시장이라는 세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특정 행위자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었을 때의 양상을 교육된 사회, 학습망, 학습시장으로 구분했다. 이때 학습시장은 한 사회 구성원들의 학습의 총량이 교육상품에 의해 극대화되며, 교육상품에 의해 학습의 내용, 방식 등이 조정되는 양상을 지칭한다. 학습시장은 [그림 3]의 모형에서 사적재원-사적공급-사적 의사결정이 작동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평생교육의 확대는 교육된 사회, 학습망의 구축과 함께 학습시장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학습시장이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곳이 아니라면 공공성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간 학술적인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교육기업 종사자들의 교육 담론에 주목하여 공교육-사교육에 대한 이분법적이고 당위적인 담론을 벗어나 새로운 논의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과 공교육의 대결적 담론의 균열과 재구성을 전체적으로 포착하는데 있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우선 상장교육기업과 대등한 규모의 비상장교육기업을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후 비상장 교육기업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교육기업 최고경영자의 교육 담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는 교육기업 최고경영자에게만 주목하였는데, 이외에도 개인과외 교습자, 학습지 교사, 학원장, 학원 강사, 교육기업 중간관리자 등 사적 교육 공급자의 다양한 하위집단별로 이들이 구성해내는 교육 담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태중·최선주(2014). 한국 상장교육기업의 출현 및 성장과정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교육**, 41(1), 197-230.
- 강태중(2008). '사교육' 팽창의 교육적 함의 탐색. **교육원리연구**, 13(1), 47-72.
- 국가통계포털(2013). 전국사업체총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 (2014년 2월 5일 인출)
- 김영철(2001). **사교육비 해소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일영(2009). **한국 사교육산업의 현주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서덕희(2003).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교육인류학연구**, 6(2), 55-89.
- 서춘래(2003).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 **교육종합연구**, 1, 47-65.
- 손준중(2010) 교사 전문성 담론의 성격분석: 이명박 정부 교원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17(4), 91-119.
- 유한구·김미란·김승보·옥준필·채창균·류지영·신동준(2009). **2008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 연구 I -종합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이광현·권용재(2011).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재정경제연구**, 20(3), 99-133.
- 이민경(2007). 중산층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담론: 자녀교육 지원태도에 대한 의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3), 159-181.
- 이민경(2008). 대학생들의 교육경험 담론 분석: 입시교육과 진로 경험의 의미화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1, 79-102.
- 이종각(2009). 공교육과 사교육: 대결을 넘어설 방법은 없는가. **한국교육학회 뉴스레터**, 45(4), 1-5.
- 이종재·김민조·고영준(2010). 한국 사교육의 전개과정과 양태. 이종재(편), **사교육: 현상과 대응** (pp. 13-44). 파주: 교육과학사.
- 이종재·장효민(2010). 사교육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 이종재(편), **사교육: 현상과 대응** (pp. 403-436). 파주: 교육과학사.
- 전홍주(2011).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담론분석: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아동교육연구**, 31(1), 351-376.
- 정범모(2009). **교육의 향방**. 파주: 교육과학사.
- 조미영·배지희(2009). 부모의 교육 참여에 대한 유아교사의 담론 분석. **아동교육**, 18(2), 221-234.
- 천세영(2003). 사교육은 정말 死해야 하는가. **교육개발**, 30(4), 24-28.

- 천세영(2004). '사교육비경감대책'의 교육재정경제학적 접근. *교육재정경제연구*, 13(2), 291-322.
- 통계청(2013). 2012년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http://kosis.kr/ups/ups_01List01.jsp?pubcode=JG
(2014년 2월 5일 인출)
- 한준상(2005). *국가과외: 누가 한국교육을 죽이는가*. 서울: 학지사.
- Bray, M. (2011). The challenge of shadow education: Private tuto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in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Retrieved from <http://www.nesse.fr/nesse/activities/reports> (1 December 2013)
- Burchardt, T., Hills, J., Propper, C. (1999). *Private Welfare and Public Policy*. Joseph Rowntree Foundation, York.
- Edwards. (1997). *Changing places? Flexibility, lifelong learning and a learning society*. London : Routledge.
- Foucault, M. 이정우 역(1998). *담론의 질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Horn, M. B. (2011). *Beyond good and evil: Understanding the role of for-profit education through the theories of disruptive innovation*.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Klein, R. (1984).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Lloyds Bank Review* (January), 12-29.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Miles, M. B., & Huberman, A. M. 박태영 외 역(2009). *질적자료분석론*. 과주: 학지사
- Robertson, S. L., Mundy, K., & Verger, A. (Eds.). (2012).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education: new actors and modes of governance in a globalizing world* Edward Elgar Publishing.
- Whitty, G., & Power, S. (2000).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in mass education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0(2), 93-107.

* 논문접수 2014년 2월 11일 / 1차 심사 2014년 3월 14일 / 2차 심사 2014년 4월 1일 / 게재승인 2014년 4월 1일

* 최선주: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 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plus 미래교육디자인 연구사업단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연구 관심분야는 한국의 성인학습자, 학습 아비투스 및 학습생애사, 학습시장, 시민들의 자발적 학습네트워크 등이다.

* E-mail: tjswnl@snu.ac.kr

*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평생교육전공)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성인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성인교육의 의미(공역), 한국의 노숙인(공저), 최신교육학개론(공저), 평생교육개론(공저) 등이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평생학습이론, 학습생애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이다.

* E-mail: kdj@snu.ac.kr

Abstract

The Education Discourse of Chief Executive Officers of the Listed Education Company: Rupture and Reconstruction of the 'Evil Private Education' Discourse^{*}

Choi, Seon Joo^{**}
Kang, Dae Joong^{***}

Private education providers in Korean society are influenced by the so-called 'evil private education' discourse which defines them as non-educational or anti-educational agents. However, the scale of education business that supplies private education outside school is relatively large. Since the mid-2000s, some education companies have grown to become listed compani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way in which the binary discourse of the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ruptures and is reconstructed in the context of the growing influences of education companies through the viewpoints of the CEOs of listed compan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 data with 10 CEOs of the listed education companies, we argue that the education discourse of those CEOs consists of two axes. One of which is a logic justifying the education supplies required outside schools and another is a logic suggesting the necessities of the partnership of private and public education. At the core of these justifications are the 'good private education' discourse that claims private education is not all evil and immortality of private education arguing that private education will persist due to the structural limits of the public education.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boundary between traditional public education and private education is blurred due to the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 and the emerging new partnership model needs to expand more. Based on the findings, we point out that the binary structure of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has limits in explaining the educational realities, and we propose the publicness of education model which considers the active role of education compani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327-B00517)

** First author,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BK21 Plus Institute of Future Educat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private education, public education, education company, publicness of education, discourse on education, discourse analysis